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시작하자 마자 ‘난타전’ “盧 이지원 회의록 삭제 지시” 조명균, 확정적 진술 안해

민주 박범계 ‘권영세 NLL 발언 녹취파일’ 추가 폭로

새누리 김태흠 “민주,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의혹” 맞붙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폭로전과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한 공방으로 얼룩졌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종대사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발언 녹취파일을 추가로 폭로했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하며 맞붙을 뽐냈다.

박 의원은 권 대사가 작년 12월10일 여의도 모 식당에서 나온 NLL 관련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사건과 이를 시발점으로 한 NLL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은 일관성 쌍둥이”라며 “정권유지와 더 나아가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권 대사는 “근데 국정원에서 그때는...MB정부... 그래서...원세훈으로 원장 바뀐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끼워 맞춰줬거든요.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를...요약보고를 한 거지, 요약보고를 한 건데. 그걸 이제, 아마 어떤 경로로 정문헌한테로 갔는데...”라고 언급했다.

이어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NLL은 조직적·체계적·장기적 음모로 뿌리는 2008년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김 의원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의 내부고발, 양심선언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민주당 당직자와 짜고 기뢰하에 이뤄

진 정치공작”이라면서 “제2의 병풍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결과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활동’은 정상적인 종북세력 견제 업무의 일환일 뿐이라며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를 문제삼은 반면,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부당개입으로 검찰 수사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당시 국정원의 댓글은 야권 상향 정치인을 비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북한 또는 이적세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정원이 종북세력의 인터넷 활동을 방관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나아가 당시 민주당과 국정원 내부직원의 ‘정치공작 공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명철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 직원이 ‘문재 업무의 일환일 뿐’이라며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를 문제삼은 반면,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부당개입으로 검찰 수사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황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사건이 축소됐다는 의혹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김민지 의원은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법무부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내부직원의 공익제보를 ‘매관매직’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더구나 장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이라면 공직부패가 사라지겠느냐”라고 추궁했다.

/박지경기자jzkpark@kwangju.co.kr

황교안 법무 “보도내용, 진술과 다른 부분 많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 시스템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기억하기로는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 대화록 파일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이 있었느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황 장관은 조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개략적으로만 안다. 수사 당시 (대화록이) 2급 기밀 관련 자료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조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한 여러 보도가 있었으나, 검찰에서 진술받은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의 진술과 관련, 황 장관이 “일부 폐기 이야기가 있었다. 결정 과정에서...”라고 하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대화록 문서를 남기고 이지원 보고자료 외에 청와대 문서 보관본을 파기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조 전 비서관의 진술내용에 대한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 “여권의 검사출신 의원이 최경환 원내대표 등 여권 고위관료에게 전해졌고 해당 언론사가 이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에 NLL 공방을 중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강원 방문, 최문순 지사 첫 업무보고 받아

“지역공약, 경제성만으로 결정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지역공약 이행 여부와 관련, “꼭 경제성만으로 지역공약사업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천시 봉의동 강원도청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 앞서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간 복선 전철 등의 사업들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저는 이 사업을 관광객 유치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강원도에 미치는 지역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부 지역 공약이 경제성 문제로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약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발전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로,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지역 중심의 상향식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zkpark@kwangju.co.kr

민주, 기초선거 공천 폐지

오늘 당원투표 결과 발표

시·군·구청장과 시·군·구의원 선거 등 기초자치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할지 여부를 묻는 민주당의 당원투표가 24일 오후 9시 종료됐다.

민주당의 전(全)당원투표는 지난

20일부터 지난 1년간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납부한 14만7000여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전화)와 문자메시지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결과 값을 전달받아 당 금고에 보관했다가 25일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한다.

/박지경기자 jzkpark@kwangju.co.kr

출구찾기 나선 민주 “민생·국정원 국조 집중하자”

김한길 “제10야당 대표로 무한한 책임감 느껴”

“대화록 실종, 여야 합의 엄정 수사하면 될 것”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정국을 넘어 본격적인 ‘출구찾기’에 나섰다. 그 앞에는 김한길 대표가 있다. 그동안 NLL발언 정국에서 문재인 의원과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휘둘러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넘어서자는 취지로 보인다.

김 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당 대표

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화록 실종과 관련, “민주당은 아직은 진상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나 특정인에게 회의록 실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며 “진상과 악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엄정한 수사가 있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연장시킨 한쪽에 민주당이 서

있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제10야당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내에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지 말자”며 적전분열을 경계했다.

김 대표는 나아가 “새누리당이 대선용 정치공작의 차원으로 제기한 NLL 논쟁과 대선 개입을 가리기 위한 국정원의 대화록 불법공개, 새누리당의 대화록 선거 활용 등이 모든 것이 하나의 치밀한 기획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

다”며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국정원 국조의 장에서 진실을 규명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어 “양당은 민생을 살리는 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경쟁하자”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국조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전날 문재인 의원의 성명 발표 후 당내 인사들을 두루 접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 대표의 회견을 계기로 당내 갈등을 극복하는 한편 정국의

초점을 대화록 유실 문제에서 국정원 국조로 이동시키는 한편 민생 문제에 집중, 수세국면을 탈피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에는 이번 정국과 관련, 문 의원과 친노세력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라서 당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조정래 최고위원이 문 의원 등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날 트위터에서 문 의원의 “NLL 논란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는 발언에 대해 “그렇다면 시작을 안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었던 박 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문재인·친노 책임론을 벌써 들고 나오는 것은 거대 정권에 맞서는 민주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jz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료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료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들을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분양완료 2013년 9월 1일 오픈예정

파격적인 임대료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54억9250만원

지상1층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만원

지상1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

지상1층 약국 69P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만원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임대가 2억2천만원 / 분양가 2억8600만원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림탑 540P
임대가 16억2천만원 / 분양가 21억6000만원

지상2층 PC방 203P
임대가 4억6000만원 / 분양가 5억7500만원

지상2층 레스토랑카페 166P
임대가 3억3200만원 / 분양가 4억15000만원

지상2층 볼링장 854P
분양가 17억8000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

지상2층~3층 골프장 906P
분양가 18억12000만원

지상3층 일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

지상3층~4층 영화관 (인정확정)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텐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